

‘노동절’ 명칭복원·공휴일 추진 퇴직금 체불 ‘반의사불벌’ 배제

노동법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자의 날’ 명칭 역사 속으로
내년부터 5월1일 ‘노동절’ 사용
장애인고용 규제 완화 포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 지정이 추진된다.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명칭은 1923년부터 사용됐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돼 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노동절을 ‘일하는 모든 국민이 따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 법률에는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다수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내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포함됐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상습 체불에 대한 실질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가가 대지급한 임금(대지급금)에 대해 국세채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회수대상으로 포함돼, 도급 구조에서의 연쇄 체불 방지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통과된 8개 법률에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 등도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청년 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노사발전재단 ‘택배 노동환경 개선’ 앞장

한노총,·택배서비스협회와 손잡고
권리증진·상생·사회공헌 등 협력

노사발전재단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노사발전재단은 27일 서울 중구 재단 본부에서 한국노총 전국 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와 ‘택배 산업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고,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과 노사 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실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택배 노동자 권리 증진 사업 발굴 및 추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강화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택배 산업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 산업’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

첫 번째 실천 과제로 ‘택배 노동자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한 ‘2025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가을철 화재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 캠페인을 물류센터·터미널 등 현장에서 실시하고,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화재 및 차량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택배 산업 노사가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재단은 택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노동 현안이 남아 있지만, 노사가 마음을 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전력거래소,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 개최

美·中 등 13개국 18개 기관 참석

전력거래소는 27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세계 계통운영자 회의(GO1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O15는 2004년 출범한 세계 주요 전력계통 운영기관 협의체로, 미국의 PJM·CAISO·MISO, 프랑스 RTE, 이탈리아 Terna, 중국 SGCC·CSG, 인도 Grid-India, 일본 TEPCO, 브라질 ONS, 러시아 SO-UPS, 한국 KPX 등 14개 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협의회 회장사인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며 13개국 18개 기관이 참

석했다. 회의 주요 의제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계통 불안정성 대응, 출력 제어 등 재생에너지 운영전략, 그리고 AI·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의 안정적 전력공급 방안이다. 특히 총회에서는 그리스 IPTO와 스위스 SwissGrid의 신규 계통운영기관 가입안이 표결을 거쳐 승인돼 글로벌 계통운영 노하우 공유와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2005년부터 GO15 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이번 서울회의를 계기로 국제 전력계통 운영 분야에서의 리더십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세종=한용수기자

경쟁사 핵심부품 공급 막은 이오시스템 ‘시정명령’

공정위 “방위산업 경쟁 질서 훼손”
공정경쟁 위해 불공정 지속 감시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사의 핵심부품 공급을 가로막은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7일 이오시스템이 방위산업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향후행위금지,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한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신보에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계수기 조립체는 포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로,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측정·표시하는 부품이다.

이오시스템은 2011년 신보와 공동으로 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 뒤, 2013년 계약을 통해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거나 외주 생산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부품 공급거절 행위가 계약 조항에 따른 것이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만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오시스템은 공

정위 제재 사실을 신보와 관련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과거 특정 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던 체제였으나, 2008년 제도 폐지 이후 복수 업체 지정이 가능해져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제도 개선 취지에 반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한우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한우 먹는 날’ 1800여 매장 소고기 할인

농식품부, 내달 10일까지 세일지원
온·오프라인 30~50%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먹는 날’(11월1일)을 맞아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630개소),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행사다. 14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884개소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29일~11월9일)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할인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 설도 등 불고기·국거

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업체별 행사 일정 및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 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7950원, 양지는 4040원이다. 이 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2980원 수준이며, 이는 같은 기간(11월 상순) 평년치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20~30% 저렴하다.

이달 31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우 국밥 나눔 행사’가 열린다. 또 전국 곳곳에서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조류 AI 선제대응… 예찰지점·기간 확대

기후부, 총조사 지점·횡수도 확대
울거울부터 과학적 예측기법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상시에 잘 지점 및 기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선제 대응은 지난 10월15일 일본의 홋카이도의 야생조류 참매에서 고병원성 AI가 이번 동절기 최초로 검출됨에

따라 국내에도 발생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새의 유입과 북상 시기가 늦어지고, 올해는 여름철에도 가끔류에서 조류AI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상시예찰 지점을 92곳에서 102곳으로 늘리고, 예찰기간도 올해 9월부터 내년 4월(통상 3월)까지 1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철새 총조사(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지점을 15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총조사 횡수도 당초 연간 8회에서 10회로 내년 2~3월에 2회를 추가한다.

특히 울거울부터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야생조류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확산을 예측하는 과학적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속한 방역을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